

소모임·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지역사회 감염 키운다

광주 코로나19 재확산 초비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광주 시민의 느슨해진 방역 의식이 지역사회 감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광주에서 최근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생활 방역지침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한 이후에도 다중시설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늘었다. 확진 판정 이후엔 동선이나 접촉자를 숨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일부 확진자의 경우 이동경로 등에 대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다"면서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광주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느슨해진 방역 의식=지난 30일 오후 5시께 광주 대표 도심인 금남로 일대와 금남 지하상가 등을 방문한 시민 중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시민 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모습은 방역 컨트롤타워인 광주 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청 직원 중 일부는 엘리베이터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시청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시청 방문객들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었다.

시청직원 전용 주차장인 지하 주차장도 방역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가장 기본적인 방역시스템인 '발열검지기'가 시청

마스크 안쓰고 거리두기 안지켜

일부 확진자 다중시설 무차별 이용

이동경로·접촉자 조사 비협조도

1층 입구에만 설치된 탓에 지하 주차장 이용 직원들은 '발열 검지기' 체크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사무실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직원 중 확진자 발생시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마스크 쓰기나 손씻기만 제대로 해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낼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초기에 잘 지켜졌던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살마' 하는 방심도 만연=광주에서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들 중 일부는 증상 발현 이후에도 직장이나 시립 밀집지역 등을 방문한 사례가 확인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이 오고간 곳을 방역하고 접촉자를 찾아내느라 가족이나 부족한 방역인력 등이 허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기침, 가래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처음 나타났지만, 8일간 직장을 오가는 등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지난 23일 광주 광복사를 방문하고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도 24일부터 감기 증상이 나타났지만, 병원과 대중 목욕탕을 다녀오는 등 도심을 활보했다. 이 여성은 증상이 나온 뒤에도 보건소를 가지 않고 한방병원을 찾았다. 당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지인과 함께 방문했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K오피스텔 입구에 '시설 폐쇄 및 소독명령서'가 붙어 있다. 이 건물 10층 다단계 업체 사무실에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지역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데, 이 지인도 결국 감염됐다.

◇확진 이후 역학조사 비협조 사례도=광주시는 지난 30일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 확진자가 이동경로와 접촉자 확인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만약 계속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밝히지 않는다면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순 특별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전남 동부 의원 5명 당론 촉구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한 목소리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과거사 입법 모델로 손꼽히는 제주 4·3 특별법처럼 지역 사회의 협의를 통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별로 이견이 극명해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민주당 5명의 동부권 의원들이 지역 사회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종 조율을 통해 조만간 법안 발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철·주철현·김희재·서동용·김승남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민주당 당론 채택과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들 의원들은 여순항쟁유족연합회와 서울유족회 등 7개 지역유족회장과 유족,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순천대 여순연구소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한

국정쟁 전 발발한 대표적 민간인 희생 사건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왜곡된 한국 현대사로 기록돼 있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6년 과거사 진실·화해를 위한 정립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만131명 인명 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간 의견 충돌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반반히 법안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때인 2001년 처음 발의됐고 이후 18·19·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매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현재 이들 5명의 의원들은 2차례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 여수·순천지역 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 한 뒤 마지막 간담회를 통해 최종 법안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법안에 민간인 희생자 부분만 넣을 것인지 군경 희생자 부분을 추가할 것인지를 놓고 일부 지역과 단체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화합과 통합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낸 제주 4·3 특별법 사례를 모델 삼을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당 당권주자들 출전 준비...내주 출마선언 잇따를 듯

이낙연 출마선언 메시지 고심

김부겸·우원식 시기 저울질

당대표와 임기 분리 확정

최고위원 출마도 붓볼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구체화 하고 있다. 정부와 당의 최대 현안이었던 코로나19 국난 극복 3차 추경안이 오는 7월 3일 국회에서 처리되면 다음 주부터는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당헌·당규에 따라 차기 당 대표가 대권에 출마하면 당당이 임기가 중단됐던 최고위원의 임기가 보장되면서 최고위원 출마도 붓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앞서 "추경이 통과된 후에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당 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 측은 출마 선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근 여의도 일대에 사무실 물색을 마쳤다. 이 의원 측은 출마 메시지에 코로나19 국난 극복 의지와 책임감, 당의 단결과 통합을 키워드로 담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원 구성이 마무리된

데 이어 북한 문제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7월 초 출마 선언을 계획중이다. 여의도 한 빌딩에 이미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회의 체계도 갖췄다. 김 전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 통합의 중요성 등을 출마 선언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당내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출마 선언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의도에 상영실을 마련해 가동 중이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 당헌상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다. 차

기 당 대표가 중도 사퇴해 임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더라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당대회까지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 김부겸 전 의원과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일부 당권 주자는 '임기 분리 당헌 개정'에 대해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해왔다.

전준위는 전대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르되 8월 29일 전대 당일엔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중앙위원 등 1000명 정도만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회를 검토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2차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사업

남도장터에서 해남미소 농수산물 구입하고 선물 받자!

사업기간

06.10. (수) ~ 07.31. (금)

사업혜택

해남미소 상품 구입시
매주 30명 무작위 추첨하여 상품증정